

반도체업계, FPI 등 주요 소재 공급망 리스크 해소 기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전경련 등 경제단체, 규제완화 환영
산업계 긍정적 “경쟁력 도움될 것”
소재독립 순항... 실효성 지적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본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계도 모처럼 외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노력이 성과를 이룬 상황에서 그렇다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강국인 일본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 통상 절차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작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 일본은 당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반도체 업계가 주요 소재를 다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당시 규제됐던 품목은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으로, 첨단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도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성명을 내고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특히 전경련이 모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모습이다.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공동 성명에서도 이름을 앞세우지 못해왔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전경련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일본 경제계와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 경제단련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소재 독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다. 실제로 불화수소는 솔브레인, SK머티리얼스가 빠르게 고순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포토레지스트도 우회 수입 길을 열었고, 국내에서 동진세미켐이 양산에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위협 요인을 줄였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FPI의 경우는 여전히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재 수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한 큰 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간 경제 협력도 재개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니 요시다 겐이치로 회장 등 경영진이 6일 삼성전자 팹팩캠퍼스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찾았다. 지난해 경계현 사장이 소니를 방문했던 바, 소니도 이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니는 삼성전자와 이미지센서 분야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IT 분야는 물론, 혼다와 함께 만든 전기차 브랜드 ‘아필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OLED 디스플레이 기

술을 배재하기 어렵다.

일본 현지에도 메모리 업체인 키옥시아가 있지만 삼성전자 메모리와 비교하면 성능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분야에서도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릿 라인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이 높다. 소니가 참여한 ‘라피더스’가 2나노 파운드리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차를 만들기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덴소 등 현지 업체보다는 삼성전자가 ‘디지털 콕핏’을 통해 우월함을 증명한 상태다.

소부장 육성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는 남는다. 여전히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7일 ‘극일’ 관련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정책 금융과 ‘반도체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상황, 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정책대화 상황 따라 WTO 결정”

산자부 불확실성 제거, 안정화 무게
“양국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 추진”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반도체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실익보다는 기업 불확실성 제거와 공급망 안정화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회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회가 진행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의 수출 규제 해빙 모드에 따라 업계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군 소부장 부분 공급망 강화와 산업계 생태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등으로 소부장 공급망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 전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 것이 굴욕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회가 진행되는 기간 분쟁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본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